

LG 이어 삼성·SK도 분사?… K-배터리 지각변동 ‘촉각’

LG화학, 배터리사업 분할 확정
시설 투자 등 자금 확보 차원으로
SK·삼성도 분사 가능성 솔솔
“아직 적자, 시기상조” 목소리도



지난달 30일 LG화학이 회사분할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모습.

LG화학이 물적 분할에 나서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의 분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내달 1일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지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것으로, LG화학은 이후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다. 다만 신설법인의 IPO(기업공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9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 신설법인의 물적 분할을 통한 회사분할안을 결의한 바 있

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63.7%가 분사 승인 안건에 찬성했고, 출석한 주식 총수의 82.3%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에도, 자본금 1000억원의 LG에너

지솔루션(가칭)을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 같은 LG화학의 물적 분할 배경으로는 재무 부담 완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IPO(기업공개) 등을 통해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수주 잔고가 150조원에 달해 매년 3조원가량 시설 투자를

하고 있어, 추가 투자를 위해 상장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 신주 발행을 통해 약 10조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분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지속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자금 확보를 위한 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사가 전지 사업을 분할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이다. 해당 사업에서 흑자 전환한 LG화학과 달리,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분사는 지속 고려되고 있으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 분사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이번 3분기 배

터리 부문에서 개선된 실적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이번 3분기 전 분기 대비 149억원 개선된 영업손실 989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지난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자동차전지 사업 수익은 3분기에 이미 손익분기점에 근접해, 내년에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다. 연간으로는 외형이 성장하고, 연 단위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지동섭 배터리 부문 대표도 지난달 21일 인터배터리 2020 행사장에서 배터리 부문 분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은 없다. 분사 가능성은 재무 등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혀, 배터리 부문의 분사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이 조합 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속도내는 압구정 재건축… 조합설립 눈앞

실거주 의무 규제에 동의 잇따라
3구역 동의율은 76%까지 달성
보유세 부담에 실거레가 일부 ↓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이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민의 50%,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주민의 75%, 동별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1만466가구 규모인 압구정동 24개 단지 아파트들은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미성1·2차)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유주 동의율 72%를 달성했다. 2구역(신현대 9·11·12차)은 조합설립 동의율 67%를 달성했으며, 3구역(현대1~7·10·13·14차) 동의율 76%까지 달성하며 조합 설립에 근접하고 있다.

비교적 사업속도가 빠른 4구역(현대 8차, 한양3·4·6차)은 조합설립 전 추정 분담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신탁방식을 고려 중이던 5구역(한양1·2차)은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조합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한번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또한 금지되기 때문에 미리 아파트를 사두려는 움직임도 있다.

압구정동에 등록된 매물을 살펴보면 한양3차(전용면적 117.26㎡)가 26억 6000만원, 현대8차(전용면적 107.64㎡)가 24억원, 현대14차(전용면적 84.98㎡)가 27억원에 나왔다. 전세는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나타난 품귀현상으로 6건만 등록됐을 뿐이다.

압구정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격이 일부 하락했다. 보유세 부담에 강남은 압구정을 비롯한 고가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7차(전용면적 144.2㎡)의 경우 지난 8월 40억원에 팔렸지만 10월에는 1억원이 넘게 떨어진 38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9월 27억4000만원에 팔린 현대12차(전용면적 110.82㎡)는 10월 한 달 새 4억원이 떨어진 23억4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그러나 재건축 진행 상황과 내부 수리 정도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재건축 아파트의 특성 상 가격 상승 요인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전망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매물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호가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으로 향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빅히트 쇼크에 공모주 개인물량 확대 ‘제동’

공모주 투자 기회 제한보다
‘개미 무덤’ 리스크가 더 커
금융당국, 규정안 ‘잠정 보류’
일부 과대 밸류에이션 지적

개인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모색돼왔던 ‘공모주 배정 규정안’이 무용론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현행 공모주 제도가 자금 동원력이 적은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대형 공모주들의 연내 상장 일정이 마무리 단계인 데다 상장 초기 강세를 보였던 일부 공모주들도 줄줄이 하락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 청약자의 공모주 투자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보다는 개인 물량을 늘렸을 때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인 공모주 비중 확대안’ 일단 보류

3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늦추기로 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 몫으로 배정된 공모주 20% 중 절반 정도에 대해 소액 청약자 우대, 추첨제 배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이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탓이다.

기관에 주어질 우리사주 청약 미달분을 개인에게 돌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렇게 될 경우 개정이 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은 25~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잠정 보류’ 상태가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다 신중히 결정하고자 의견을 종합하는 단계”라며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업계와의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살펴보면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개인에게 배정해야 한다.

〈올해 대형 공모주 기관·일반 경쟁률 개요〉

/한국거래소

기업명	기관 경쟁률	일반 경쟁률	청약증거금	상장시기
SK바이오팜	835대 1	323대 1	30조9899억원	7월2일
카카오게임즈	1478대 1	1525대 1	58조5543억원	9월10일
빅히트	1117대 1	540대 1	58조4237억원	10월15일
교촌에프앤비	999 대 1			11월12일(예정)

반면 기관은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았다. 개인 물량 20% 이상과 하이일드 펀드 10% 이상, 우리사주 조합원 20%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몫이 최대 50%에 달한다.

공모주 과실이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은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로 이어지는 대형 공모주의 IPO에서 비롯됐다. 공모주를 받길 원하는 개인은 통상 이틀간 진행되는 청약기간 동안 증거금의 50%를 입금해 신청을 완료한 후 배정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나머지 잔금의 50%를 넣어야 한다. 많은 증거금을 입금할수록 주식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다.

증시에서 ‘공모주 열풍’이 일어나며 경쟁률이 높아지자 개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여론을 의식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이유다.

◆오히려 ‘개미 무덤’ 키울 수 있어… 무용론 우세

하지만 최근엔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하다. 증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IPO 시장 유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이 잘못 진입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형 증권사 IPO 담당자는 “일 년에 두 번 있는 명절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혼잡 상황을 막기 위해 평소 사람 없는 도로 전체를 공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빅히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기대감에 투자하는 개

인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빅히트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빠지며 당분간 공모주 분위기는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모주 열풍은 빅히트의 내림세와 함께 잠잠해진 분위기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공모 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냉각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집중된 수요예측 일정으로 인해 공모희망가 대비 공모가가 더욱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개인의 이익을 늘려주기 위해 개선한 제도가 반대로 손실을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주목도가 떨어지는 종목의 경우 인수 증권회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공모주 종목은 1년에 3~4개뿐”이라며 “이런 경우에만 맞춰 개인 물량을 늘리면 매각되지 않을 시 인수회사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높은 밸류에이션(가치대비 주가수준)에 설정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위 IPO 담당자는 “비이성적인 가격에도 수요가 뒷받침되며 몸집만 커진 탓”이라며 “개인도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공모주 투자전략이 진화할 것이다.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선분은 개선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vin@